

민주연구원 “북중관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월 6일(목), “북중관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2026년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전후로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브리핑은 6월 북중 정상회담과 7월 고위급 교류로 이어진 북중 간 ‘전략적 협력’ 양상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브리핑은 먼저 최근 북중관계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첫째, 북중 정상회담과 이후 고위급 논의에서 ‘비핵화 의제가 배제’되었다. 이는 중국이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남겨두되, 현재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북한의 안정과 북중 전략적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둘째, 북중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통해 ‘당 대 당 교류’가 제도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적 정체성 강조와 함께 북중 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 셋째,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중·러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2025년 북중 무역액은 27억 3,487만달러로 2024년 21억 8039만달러 대비 25.4% 증가하였고, 2026년 상반기 15억달러를 돌파하며 2017년 제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두만강하구 개발 등 북중러 3국의 초국경 관광·물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 넷째,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임을 재확인하였다.

-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과제로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 첫째, 대북정책 및 비핵화 구상에 대한 ‘한미 공조 및 중국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한중 외교안보 당국자 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현 단계 중국이 인식하는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 원칙은 견지하되 비핵화 우선 접근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한중 대화 채널에서 비핵화를 고리로 한 대중 공조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 대북정책 간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중국에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 자제와 남북대화 복귀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
 -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 하구 개발을 둘러싼 북중러 협력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GTI 재가입을 유도하고, 보건·환경·농업 등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인프라·투자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민주연구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입지 강화로 북중관계 밀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중관계 동향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만큼,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강화가 대북 외교환경과 동북아 안보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